

# “28일까지 통과” VS “통일부 폐지 불가”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1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신당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130석으로 원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 16일 김효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예초 ‘강경 반대’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긍정, 통일부 통합 절대 수용 불가’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한나라당도 원내 수장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어느 정도 협상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 정부조직 개편안의 통과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부조직개편안 여야 ‘기싸움’ 팽팽 신당 “큰 틀 긍정적” 통과 가능성도

◇한나라당은 안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28일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 취임 시에도 당시 한나라당이 재직 294중 161석으로 과반이었음에도 당선인 측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새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도록 도와줬다”며 “협조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신당이 여러 비난을 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꼬집고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신당과 상의해가면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며 토목부처만 남겼다는 비판 역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폄하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신당=17일 손학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신당은 당초 강경 반대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소 유연한 쪽으로 선회했으나 통일부 통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통일부 통합안을 고수할 경우 임시국회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에 대해선 18일

자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인수위, 한나라당과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절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구성된 당내 정부조직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큰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민간과 지방정부로 넘기는 분권화, 민영화의 구체적 계획이 뒤따라야 하는데 허겁지겁하다 보니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라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군사긴장 완화, 통일 문제 등은 전통적 외교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며 “남북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려면 외교부가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오후 김금실, 박홍수 전 장관 등 새로 임명된 최고위원들과 당산동 당사에서 첫 회의를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당, 강금실·박홍수 등 최고위원 7명 임명

### 386 초·재선 의원 배제...외부 영입 없어 일각선 “쇄신의 쇄자도 없다” 강력 반발

대통합민주신당의 새 지도부 구성이 계파와 지역을 안배하고 중진들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당내 안정을 기하는 쪽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거론됐던 386 초·재선 의원들은 젊은층이 지도부에 전진 배치되는 데 대한 당내 반발과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돼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대표는 17일 김금실 전 법무장관, 박홍수 전 농림장관, 유인태 홍재형·박명광 의원을 최고위원에 새로 임명하고 정균환·김상희 전 최고위원을 유임시키는 등 7명의 최고위원단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당초 당내인사 가운데 5명의 최고위원을 우선 임명하고 2명은 외부인사 영입 뒤편에 남겨둘

것으로 예상했으나 “김금실 박홍수 전 장관이 그동안 당내 활동의 전면에 나선 적이 없어 사실상의 외부 영입”이라면서 최고위원 7명 전원에게 대해 인선을 마쳤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신당의 공명선대위원장과 “엄지유세지원단” 단장을 맡았고 박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다 임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위원 7명 전원이 내부 인사로 구성된 셈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번 최고위원 인선은 쇄신을 위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지역과 계층을 고려해 안배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강 전 장관은 386그룹의 강력한 권유를 받았으나 마지막까지 고사하다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은 영남권과 친노그룹 소속 차원에서 인선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유인태 의원은 재야출신과 친노중진 배려 차원에서 인선이 이뤄졌고 홍재형 의원은 동요하는 충북권 의원들을 다독이기 위한 카드로 발탁됐으며 박명광 의원은 정동영계를 대변하기 위한 통로로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선 결과에 대해 수도권 386 등 손 대표 지지그룹과 친노그룹 등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초선 쇄신모임과 호남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호남권 초선의원은 “호남쪽, 특히 광주·전남 쪽에서는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한 김금실 박홍수 전 장관과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한 유인태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해서 ‘노무현 색깔’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 “김만복 대화록 달라”

### 검찰, 인수위에 요청

검찰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당시 대화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법적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과 인수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정부분과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위원) 앞으로 팩스를 보내 김 장관이 대선 전날 방북한 경위 등과 관련해 인수위에 보고한 대화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면담록을 입수해 파악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건을 확보하는 대로 김 장관의 대화록 유출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인지, 문건에 ‘국가기밀’ 등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등을 검토한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입장을 개진할 단계는 아니지만,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당연히 인지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여야 협력 새 모델 만들자”

### 이명박 당선인, 신당·민노당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협조 구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직접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개편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이다.

이 당선자의 이날 정당 방문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일 중심’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로 손 대표를 찾아가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기대와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일을 했던 사람을 보내 설명도 하고,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조직개편안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빠르게 준비해서 내각을 구성하기 전에 한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오늘 정부조직과 관련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특위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손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해야 하는데 경제 건설, 일자리에 관련해 여야가 없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는 신경전이 벌

어졌다.

손 대표가 “언뜻 보기에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막강한 대통령이 되는 것 같다”고 견제하자 이 당선인은 “아 그렇지 않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를 잘 알기 때문에...”라며 “내각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청와대 수석들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경호실도 처장으로 낮추겠다”고 맞섰다. 손 대표는 또 “총리 위상도 상당히 격하했으며 비서실 기구도 축소됐다”고 다시 지적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아니다”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관과 경계지사를 지낸) 손 대표는 이해 할 거다”고 답했다.

손 대표는 이어 “당선인께서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급격한 정책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한 나라의 정책이 급격하게 왔다갔다 할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며 “소의 계층 문제에 누구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 응수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문대동 민노당 당사로 옮겨, 심상정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을 두 번 하는 것도 아니다”며 “여야를 초월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여튼 도와 달라”고 몸을 낮췄다.

심 위원장은 개편안을 거론하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선 섭섭했다”며 “여성부는 폐지가 아니라 확대되어야 한다. 시대적 흐름과 역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BBK 특검팀, 감사원에 “상암 DMC 자료 제출해 달라”

### 특혜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이명박 특검팀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는 출범 이후 8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하던 특검팀의 첫 본격 수사 행보로 앞선 검찰의 수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호영 특검 수사팀은 17일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인 3팀(김학근·최철 특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 자료를 감사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자재행정감사본부 소속 감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과 뉴타운 건설사업 등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정기 감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상암동 DMC 사건의 핵심은 이 당선인이 시장이던 2002년 12월 통장 잔고가 100원도 안 됐던 ㈜한독산학 협력단지가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부지를 특혜분양받는 한편 거짓 외자 유치 계획을 세워 서울시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다.

특검 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의 초기 수사자료와 조만간 감사원이 임의

제출한 감사자료를 비교해가며 최대한 효율적인 수사계획을 세워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수사 기간 동안 최대한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경준씨 변호인이 제기했던 검찰의 ‘회유·협박’ 진정과 관련된 서류를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회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학근 특검보는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특검보 전체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아직 (기획입국설을 수사할 지에 대한) 회의도 열지 못한 상태로 관련 자료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광 법성포 준비 구정맞이 직송판매**

법성포 명품, 준비, 구정맞이, 직송판매, 준비, 구정맞이, 직송판매

₩ 250,000	₩ 150,000	₩ 100,000
₩ 100,000	₩ 70,000	₩ 50,000

**법성포상금비 061)356-7600**

**올 상 준비**

법성포 명품, 준비, 구정맞이, 직송판매, 준비, 구정맞이, 직송판매